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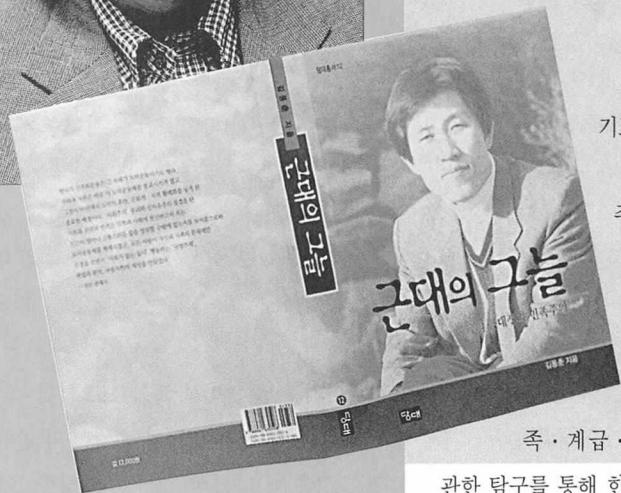
# 시민사회 발전 가로막는 거대한 ‘그늘’

『근대의 그늘』펴낸 김동춘 교수



김동춘 교수

당대/A5신/392면/13,000원



‘근대·역사·도덕·노동자·사회운동’ 같은 김동춘 교수(41, 성공회대 사회학)의 관심목록은 제철이 한참 지난 것으로 여겨지는 주제들이다. 유행과 무관하게 몇 가지 주제에 대한 탐구를 고수하는 까닭을 김교수는 자신의 성격 탓으로 돌린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해결된 문제가 아닌데, 남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완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지요. 또, 어떤 이론이나 연구결과라도 연구자로서 제 양심에 비춰 봤을 때,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유행을 쫓지 않는 고집스런 연구자세

『근대의 그늘』(당대)에도 김교수의 고집스런 연구자세가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 실린 10편의 글은 “우리에게 ‘근대’ 또는 ‘근대성’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충실했던 답변들이다. 『분단과 한국사회』(역사비평사, 1997)에 수록된 〈한국자본주의와 지배질서〉〈남북한 이질화의 사회학적 고찰〉에서 보여준 문제의식을 심화시킨 것이

전작에서 한국자본주의를 역사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한 김동춘 교수가 우리에게 근대성은 과연 무엇인지 묻는 새로운 저서를 펴냈다. 김교수는 이 책에서 1950년대를 한국 시민사회의 기원으로, ‘권위주의적 가족자본주의’를 한국사회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교수는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근대의 그늘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우리식 근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기도 하다.

앞서의 글들이 “한국 자본주의를 어떻게 역사구조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것인가”라는 입론적 성격이 짙었다면, 이번 책에서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민족·가족·계급·교육 등의 내적 연관성에

관한 탐구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기원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김교수는 한국 시민사회의 기점으로 1950년대를 지목한다.

“이념 없는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살아남기를 내면화한 시기가 바로 50년대입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함을 절감한 탓에 무조건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의 자기보존 생존논리가 이때 생겼지요. 이 논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1950년대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성격을 김교수는 ‘권위주의적 가족자본주의’로 규정한다. 얼굴이 익은 사람만 신뢰하는, 속된 말로 ‘낯짜 사회’라는 얘기다. 또한, 김교수의 눈에 비친 한국 사회는 ‘무규범의 사회’다.

“전통사회에는 나름대로 생활의 준칙이 있었지요. 하지만 근대화 물결에 휩쓸려 기준의 도덕은 사라지고, 새로운 규범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자본주의와 무규범성은 사회 전분야에서 표출되는데, 교육계에도 ‘근대의 그늘’이 드리워

져 있다. 김동춘 교수는 ‘과잉 교육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그 어두움을 드러낸다. 김교수는 교육열이 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의 산물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통계수치를 근거로 일제시대에도 교육열이 대단했다고 지적한다.

## 근대의 그늘 걷어내는 방안 제시해

게다가 1950년대에 이미 교육과 학력에 대한 국가관리체계가 확립된 것으로 본다. 상급학교 진학 열기는 국가공인 ‘학력증’ 취득이 유일한 목적이었고, 그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교수는 교육열을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억제된 계급갈등의 반사적 표현으로 해석한다.

김교수는 과잉 교육열이 몰고온 가장 큰 폐단으로 대학교육의 과행현상을 꼽는다. 대학 졸업자의 숫자는 어느 나라에 뛰어지지 않지만, 그들의 지적 수준은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지적 황폐함에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우리나라에는 열심히 연구하는 저자나 연구자가 거의 없지요. 우리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려면 ‘국민교육’의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논쟁의 활성화와 읽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 급선무죠.”

이밖에 우리 사회에 드리운 근대의 그늘을 걷어내는 방안으로 김교수는 ‘우리식 근대화’를 제기한다. 우리의 전통을 되찾자는 특수화 전략은 아니고, 우리 나름의 장점을 오늘에 되살리자는 제안이다. — 최성일 기자